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 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중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해당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른 의견의 반영 여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 제44조의2 및 제7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수리계산서 및 설계도서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하는 등 제방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 공사, 지주 설치 등 제방 훼손이 미미하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

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하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 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불법 시설물 등이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 보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계측·감시 또는 작동·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대형 불법 시설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될 경우 하천시설에 걸려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치에 불법 시설물 등이 적치되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 유출 시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5조제2항제1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0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이행강제금 금액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나.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다. 나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

- 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무단 점용한 경우
-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 및 수질 보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이행강제금 금액 |
|---------------------------------------------------------------------------------------------------------|-----------|----------|
|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 | 300      |
| 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          |
| 1)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           | 1,000    |
| 2)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br>(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700      |
| 3) 그 밖의 사유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500      |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생략)                                                                                                                                              |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u>하</u> 며, 해당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른 의견의 반영 여부( <u>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u> )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수리계산서 및 설계도서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하는 등 제방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 현

<신 설>

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 공사, 지주 설치 등 제방 훼손이 미미하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 검토 및 현장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 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하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의 범위

<신 설>

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  
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  
급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 보수 공사를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경우

2. 불법 시설물 등이 수위관측  
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  
레비전(CCTV), 수문, 통문,  
보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계측·감시 또는 작동·운영  
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대형 불법 시설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될 경우 하천  
시설에 걸려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  
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치  
에 불법 시설물 등이 적치되

|                                                                                                                                                                                                                          |                                                                                                                                                                                                                                                                                              |
|--------------------------------------------------------------------------------------------------------------------------------------------------------------------------------------------------------------------------|----------------------------------------------------------------------------------------------------------------------------------------------------------------------------------------------------------------------------------------------------------------------------------------------|
|                                                                                                                                                                                                                          | <p><u>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 유출<br/>시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br/>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br/>있는 경우</u></p> <p>5. <u>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br/>명·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br/>우려가 있는 경우</u></p> <p>6.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br/>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br/>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br/>거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br/>위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br/>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br/>경우</u></p> |
|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br>같음)                                                                                                                                                                                                                                                                  |
| <p>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br/>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br/>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br/>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br/>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br/>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br/>제1호자목·카목 및 제3호의 권<br/>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br/>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br/>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p> | <p>② -----<br/>-----<br/>-----<br/>-----<br/>-----<br/>-----<br/>-----<br/>-----<br/>-----<br/>-----</p>                                                                                                                                                                                     |

|                                                                                                                                                                                                                                                   |                                                                                                                                                                                                                                                                                                                                                                             |
|---------------------------------------------------------------------------------------------------------------------------------------------------------------------------------------------------------------------------------------------------|-----------------------------------------------------------------------------------------------------------------------------------------------------------------------------------------------------------------------------------------------------------------------------------------------------------------------------------------------------------------------------|
| <p>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p>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 호. (생략)</p> <p><u>&lt;신설&gt;</u></p> <p>2.·3. (생략)</p> <p>③ (생략)</p> <p><u>&lt;신설&gt;</u></p> | <p>-----</p> <p>-----</p> <p>-----</p> <p>-----</p> <p>-----</p> <p>-----</p> <p>-----.</p> <p>1. -----</p> <p>-----</p> <p>가. ~ 호. (현행과 같음)</p> <p><u>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u></p> <p>2.·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u></p> <p><u>②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u></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
| 연 락 처          | (044) 201 - 7538 |